

2017년 중국 경제운용 방향 및 전망

현상백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부연구위원 (sbhyun@kiep.go.kr, Tel: 044-414-1284)

이호진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 (hyojinlee@kiep.go.kr, Tel: 044-414-1057)

조고운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 (kucho@kiep.go.kr, Tel: 044-414-1145)

오윤미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 (ymoh@kiep.go.kr, Tel: 044-414-1203)

차 례

1. 2017년 양회(兩會) 개요
2. 2017년 경제운용 방향
3. 2017년 9대 중점 업무
4.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제2기 5차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017년 3월 3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됨.
-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를 통해 2017년 거시경제 운용방향 및 중점 추진 업무를 발표함.
- ▶ 2017년 중국의 거시경제 운용방향은 대내외 정치·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성장'보다는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경제 개혁 추진 및 금융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의 하한선인 6.5% 내외로 제시하여 단기 부양책을 통한 성장보다 '안정 속의 개혁추진'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이고, 고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도 도시 신규 취업자 목표치를 2016년보다 100만 명 증가한 1,100만 명 이상으로 제시하여 '고용 안정'에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임.
- 통화정책은 기존의 확장에서 중립적 기조로 전환하여 금융 리스크 관리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고, 재정정책은 2016년에 이어 확장적 기조를 지속·확대하여 경제성장과 연관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하반기에는 향후 5년(2018~22)간 중국을 통치할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제19차 당대회가 개최될 예정인바, 중국정부는 순조로운 시진핑 1인 집권체제 구축을 위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 중국정부는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에서 ① 공급 측 구조개혁 ② 농업 공급 측 개혁 ③ 내수 진작 ④ 제도 개혁 심화 ⑤ 실물경제 발전 ⑥ 지역 협동 발전 ⑦ 대외개방 심화 ⑧ 녹색발전 ⑨ 민생개선 등 2017년 경제 및 사회 분야 9대 중점업무를 제시
- 2017년에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제시하기보다 2016년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 공급 측 구조 개혁 △ 중국제조 2025 △ 인터넷 플러스 △대중창업·만중창신 △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 일대일로 등 국가전략을 심화하거나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음.
- 특히 2017년을 공급 측 구조개혁 심화의 해로 지정하여 △ 과잉 생산설비 해소 △ 부동산 재고 해소 △ 부채 레버리지 축소 △ 기업원가 절감 △ 취약부문 지원 등 5대 중점업무를 적극 추진할 계획
- ▶ 중국정부가 2017년 경제 운용에서 금융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업부채 리스크,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등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물경제 또는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중국 국내 리스크보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 및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2017년 중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1. 2017년 양회(兩會) 개요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제12기 5차 양회(兩會)¹⁾가 2017년 3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주석: 장더장(張德江))은 3월 3일에 개막하여 13일에 폐막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위원장: 위정성(俞正聲))은 3월 5일에 개막하여 15일에 폐막
- o 이번 전인대 개막식에는 총 2,924명 인민대표 중 2,862명이 참석하였고, 인민대표는 당정 지도자 및 간부를 비롯하여 노동자, 농민, 농민공, 기업인, 기술직 종사자, 소수민족 대표 등으로 구성²⁾
- 중국경제의 운용방향 및 주요 정책은 전년 9월경에 개최되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中全會)’와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협의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듬해 3월에 개최되는 전인대 개막 당일 국무원 총리가 발표하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

■ 이번 전인대에서는 중국정부가 제출한 ‘정부 업무보고(국무원)’³⁾,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⁴⁾, ‘2017년 정부예산안 보고(재정부)’⁵⁾에 대해 심의하고, 2017년 중국의 △ 거시경제 목표 △ 경제운용 방향 △ 중점 추진업무 등을 확정

- 3월 5일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13차 5개년 계획(2016~20)’ 실시 첫해인 2016년도 국무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2017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주요 예상 목표치를 제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주임: 허리펑(何立峰))가 제출한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는 전인대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7년 경제 및 사회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9대 중점업무 추진 내용을 확정
- 재정부(부장: 샤오제(肖捷))가 제출한 ‘2017년 정부예산안 보고(재정부)’는 전인대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년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 집행결과와 2017년 예산안 및 재정정책 운용방향을 확정

■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집행기구로 우리나라 정기국회에 해당하고, 정협은 중국 최고 국정 자문기구로 민족 번영 및 통일 협의체 기능도 수행

- 전인대는 △ 헌법 개정 △ 법률 제정 △ 지도부 선출 △ 고위 관료 임명 △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수립 △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안 심의 등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고 심의
- 정협은 중국 공산당을 비롯한 각 정당⁶⁾ 대표, 무당파 민주인사, 인민 단체, 소수민족 대표, 홍콩·마카오·대만

1) 양회는 우리나라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중국의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등 두 개의 정치회의를 통칭함.

2)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7lh/2017-03/12/c_1120614350.htm?from=timeline&isappinstalled=0 (검색일: 2017. 3. 13).

3) 「2017年政府工作报告」.

4) 「关于2016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执行情况与2017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草案的报告」.

5) 「关于2016年中央和地方预算执行情况与2017年中央和地方预算草案的报告」.

6) 중국에는 중국 공산당 이외 8개 민주제당파(民主諸黨派)라고 불리는 △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 중국민중동맹 △ 중국민주건국회

및 화교 대표 등으로 구성되고, 중국정부나 인민대표회의에 국가 정책에 대한 논의 사항을 건의하는 범국가적 자문회의의 성격을 지님.

2. 2017년 경제운용 방향

가. 주요 거시경제 목표

- 중국정부는 「정부 업무보고」 및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에서 △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 지속 △ 국제 투자 및 무역의 부진 △ 신보호주의 대두 등 대외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 수요 및 공급의 구조적 불균형 △ 유효수요 증가 부진 △리스크 증대 △ 환경오염 발생 등의 대내적 요인으로 인해 2017년 중국경제는 경기하방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평가
 - 이에 2017년에는 질적 성장과 공급 측 구조개혁 추진에 중점을 둔다는 기본 방침 아래 △ 성장의 합리적 구간 유지 △ 고용 안정 △ 물가 안정 △ 국제수지 균형 △ 경제구조 개선 △ 민생·복지 증진 등 6대 목표를 제시
- [안정적 성장] △ 중국경제의 중속성장 단계 진입 △ 2020년 ‘전면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위한 장기목표 (2016~20년 중 평균성장률 6.5% 이상) △ 고용확대 필요성 △ 공급 측 구조개혁 추진 등을 고려하여 2017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 내외’(2016년 목표 6.5~7.0%, 실적 6.7%)로 설정
- [고용 안정] 도시지역 신규고용 목표를 작년대비 100만 명 증가한 1,100만 명 이상(2016년 목표 1,000만 명 이상, 실적 1,314만 명)으로 확대하고, 실업률 목표치를 4.5% 이하(2016년 목표 4.5% 이하, 실적 4.02%)로 제시
 - 2017년 1,500만 명에 달하는 신규 노동력의 취업시장 유입과 과잉생산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의 전환수요 증가 등에 따른 취업 압력 상승과 동시에 은퇴 등 고용 공백을 고려한 도시지역 신규 일자리 목표 설정
- [물가 안정] 이월 요인(+0.6%p 상승요인)과 신규 물가상승 요인(수입상품 가격 상승, 국제상품 가격 상승, 가격개혁 요인 등)을 고려하여 CPI 상승률 목표치를 3.0% 내외로 제시
- [국제수지 균형] 2016년에 이어 구체적인 교역증가율 목표(2016년 실적 -0.9%)를 제시하지 않고, △ 상품 수출증가율의 안정적 수준 회복 △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을 통한 서비스 무역 구조 최적화 △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 해외투자의 질적 제고 추진 등의 방향성만 제시

■ [경제구조 개선] 경제성장 구조의 질적 향상 및 개선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 제고 △ 서비스업 및 R&D 비중 제고 △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에너지 소모량 감축 등을 추진할 계획

- 최종 소비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율은 전년대비 4.7%p 증가(2015년 59.9% → 2016년 64.6%)한 반면, 투자의 기여율은 2015년 42.6%에서 2016년 42.2%로 0.4%p 하락
- 2016년 서비스업/GDP 비중은 51.6%, R&D 투입/GDP 비중은 2.1%,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는 -5.0% 등을 기록
- o 2016년 3차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전년대비 0.6%p 확대된 가운데 2017년 3차산업의 성장 기여율 목표치는 52.2%로 제시(2017년 2차산업 성장 기여율 목표 39.6%, 1차산업 성장 기여율 목표 8.2%)

■ [민생·복지 증진] △ 농촌 빈곤인구 1,000만 명 이상 감축 △ 340만 명의 빈곤층 타지 이주 △ 호적인구 도시화율 1.0%p 이상 제고 △ 교육·위생·문화 등 공공서비스 평균화 수준 제고 △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등 목표를 설정

표 1. 중국 주요경제지표의 2016년 실적과 2017년 목표

지표	2016년		2017년 목표
	목표	실적	
경제성장률(%)	6.5~7.0	6.7	약 6.5
소비자물가 상승률(%)	3.0 내외	2.0	약 3.0
도시 신규취업자 수(만 명)	1,000 이상	1,314	1,100 이상
도시지역 등록실업률(%)	4.5 이내	4.02	4.5 이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10.5	7.9(실질 8.6)	약 9.0
소비재 소매판매 증가율(%)	11.0	10.4(실질 9.6)	약 10.0
무역증가율(%)	세계시장 점유율 유지	-0.9	상품무역 안정적 수준 회복 서비스 무역 성장 외자유입 규모 유지 해외투자 안정 발전
총통화(M2) 증가율(%)	13.0	11.3	약 12.0
사회융자총액(잔액) 증가율(%)	13 내외	12.8	약 12.0
재정적자(조 위안)	2.18 (중앙 1.4, 지방 0.78)	2.18 (중앙 1.40, 지방 0.78)	2.38 (중앙 1.55, 지방 0.83)
재정적자/GDP(%)	3.0	2.9	3.0

자료: 「정부업무보고」; 「2016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나. 거시경제정책 기조

■ [거시정책 기조] 중국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중립적 통화정책을 2017년 거시경제정책 기조로 제시하였고, 각 경제지표 구간 목표 달성을 위한 선별적인 조절을 실행할 계획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줄곧 ‘확장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이라는 정책 조합을 시행해왔으나, 2017년에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중립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하여 정책 조합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임.
- 재정정책은 경제성장 및 구조 개혁에 있어 보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통화정책은 2016년의 확장적인 기조에서 중립적인 기조로 정책 방향 전환을 통해 성장보다는 금융 리스크 관리 위주로 운용할 계획⁷⁾

■ [확장적 재정정책] 2017년 재정정책은 2016년에 비해 안정적인 경제성장 및 경제개혁 추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재정적자 규모의 양적 확대보다는 정부지출의 효율성 및 정책 효과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

- 2017년 재정적자 규모 목표치는 2016년보다 2,000억 위안 증가한 2조 3,800억 위안(중앙 1조 5,500억, 지방 8,300억)으로 제시
 - o 2017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2016년과 동일한 3%로 설정하였으나, 지방특별채권 등 예산외 재정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정정책 효율성 및 정확도 제고를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일 예정
- 재정부가 제출한 『2017년 정부 예산안 보고』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2017년 국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은 각각 16조 8,630억 위안(작년대비 5% 증가), 19조 4,863억 위안으로, 재정적자 규모는 2016년 대비 2,000억 위안 늘어난 2조 3,800억 위안으로 편성
 - o 이 중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는 2016년 대비 1,500억 위안 증가한 1조 5,500억 위안이며,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는 2016년 대비 500억 위안 증가한 8,300억 위안으로 편성
- 2017년 재정정책 중점 추진 업무로는 △ 감세정책 및 수수료 인하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 공급 측 구조개혁 △ 유효수요 확대 △ 민생보장·빈곤구제 등을 제시
 - o 감세정책은 △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전환 프로그램 지속 추진 △ 소기업 및 마이크로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50% 감세 범위를 연매출 30억 위안에서 50억 위안으로 확대 △ R&D형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추가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 △ 물류기업의 벌크상품 창고시설에 대한 토지사용세 감면 등을 추진하여 중국기업들의 세금부담 3,500억 위안을 경감할 계획
 - o 공급 측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강·석탄 등 공급과잉 국유기업의 대량 실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재취업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
 - o 실물경제의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으로는 △ 기초인프라 건설에 중앙재정 5,076억 위안 투입 △ 산업고도화 특별자금 지원을 통한 〈중국제조 2025〉 전략 추진 및 국가 신흥전략산업 육성 △ 중소기업발전 특별자금 지원을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서비스무역혁신발전기금 설립을 통한 대외무역 범위를 확대 등을 제시

7) 2016년 중국 통화정책은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상 확장적인 기조로 운영되었으나, 2017년에는 국정운영 목표를 성장보다는 안정에 중점을 두게 됨에 따라 2016년에 비해 다소 긴축적인 운영이 예상됨.

- 지방정부 부채 관리를 엄격히 관리하고 불법적인 채무 보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자금조달에 있어 공공사업 민자유치(PPP: Public-Private Partnership)를 활용할 계획
- o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억제를 위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채무교환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고, 지방정부 채무액 상한선 설정(2016년 말 17조 2,000억 위안)을 통해 신규 부채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o 지방정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PPP 관련 제도 정비 및 표준화 작업을 통해 공공사업 자금조달에 있어 PPP를 적극 활용할 예정(2016년 말 기준 1,351건 2조 2,000억 위안 PPP 체결)

표 2. 중국의 재정정책 운용방향

재정정책 중점과제	주요 내용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성장 목표 달성	- 2017년 재정적자 규모 확대: 2.38조 위안(전년대비 2,000억 위안 확대/중앙 1.55조, 지방 8,300억) · 재정적자/GDP 비율 목표: 3%(2016년과 동일) - 중앙재정(5,076억 위안)을 기초 인프라 건설에 투입 - 정부투자자금 설립, 민자유치(PPP) 운용을 통한 민간 자금 활용
감세정책을 통한 기업 부담 경감	-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로의 전환을 통해 기업들의 세금(3,500억 위안) 및 비용(2,000억 위안) 부담 경감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확대(과세 소득상한선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 R&D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세금 공제비율 확대(50%에서 75%로 조정)
실물경제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기초인프라 건설에 중앙재정 5,076억 위안 투입 - 산업고도화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중국제조 2025' 전략 추진 및 국가 전략 신흥산업 육성 - 중소기업발전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서비스무역혁신발전기금 설립을 통해 대외무역 범위 확대 등을 제시함.
민생개선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	- 농촌 빈곤층 1,000만 명 이상 축소 - 빈곤층 340만 명에 대한 거주지 이전 프로젝트 추진
재정자금의 효율적 활용	-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지출 5% 이상 축소 - 삼공비(三公费) 지출 증가 금지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관리·감독 강화	- 기존 지방정부 채무에 대해 지방채 전환 프로그램 추진 - 지방 채무관리제도 실시에 대한 감독 강화 - 지방정부의 신규 차입에 대한 규제 철저히 시행 - 공공사업 민자유치(PPP)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

자료: 「정부업무보고」,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 「2017년 정부예산안 보고」.

■ [중립적 통화정책] 2017년 통화정책은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기조로 운영하고, 인민은행의 통화(M2) 및 사회용자규모 증가율 목표치를 모두 2016년보다 1%p 낮은 12%로 제시

-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한 단기 부양책으로서의 통화정책 활용은 다소 감소하고, 부동산 버블 리스크, 부채 레버리지 축소 등 금융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데, 2016년과 비교하여 다소 긴축적인 운용이 예상
- o 2016년 「정부 업무보고」와 비교 시 금융개혁에 대한 내용은 생략된 반면, 금융 리스크의 안정적인 관리를 강조함.

- 경제하방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긴축 일변도의 운영보다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동성 공급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미세조정 위주로 운영하여 중국경제의 연착륙을 도모⁸⁾
- 통화정책의 금융정책자금이 공급 측 구조개혁, 농촌 구조개혁, 중소기업 성장 등 실물경제의 실질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실물경제에 대한 전달경로를 개선할 계획
- 위안화 환율제도의 시장화 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위안화 환율의 안정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중국기업의 해외 M&A 자금을 포함한 중국 개인과 기업들의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자본유출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하여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축소를 방지할 계획

표 3. 중국정부의 통화정책 운용방향

통화정책 중점 과제	주요 내용
중립적 통화정책 실시	- 경제안정 및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한 중립적 운용으로 전환 - 2017년 M2 및 사회용자총액 증가율 목표를 2016년보다 1%p 낮은 12% 내외로 설정
금융 리스크 관리	- 부채 레버리지 축소를 통해 공급 측 개혁 추진 - 부동산 거품 리스크 방지
실물경제 안정 및 경제구조 개선 지원	- 다양한 신규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적정수준의 통화량을 시장에 공급 - 실물경제 발전에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통화정책 전달경로 개선 - 지역별 차별화 지원을 통해 지역 격차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실현 - 농업분야 구조개혁 지원
위안화 환율 안정	-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통제 - 위안화 환율 결정 시스템 시장화 추진
자본시장 개방	- 채권시장 개방을 통한 해외자본 유치

자료: 「정부업무보고」,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

3. 2017년 9대 중점 업무

■ 중국정부는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에서 2017년 경제 및 사회 분야 9대 중점업무를 제시

- 9대 중점업무로 ① 공급 측 구조개혁 ② 농업 공급 측 개혁 ③ 내수 진작 ④ 제도 개혁 심화 ⑤ 실물경제 발전 ⑥ 지역 협동 발전 ⑦ 대외개방 심화 ⑧ 녹색발전 ⑨ 민생개선을 제시

8) 가계 및 기업 등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예금·대출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조정보다는 단기 금융시장(만기 1년 이하)에 영향을 미치는 △ 공개시장조작(RP) △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O: Short-term Liquidity Operation) △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Standing Lending Facility) △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Medium-term Lending Facility) 등 신규 정책수단을 활용한 단기 유동성 조절 위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① 공급 측 구조개혁] 공급 측 구조개혁⁹⁾의 5대 중점업무인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¹⁰⁾를 적극 추진하여 △ 과잉생산 해소 △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 시행 △ 좀비기업 퇴출 △ 실물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

- 중국정부는 2016년 12월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7년을 ‘공급 측 개혁 심화의 해’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5대 중점업무 내용을 구체화하여 공급 측 개혁 추진을 심화할 계획
- [과잉 생산설비 해소] △ 철강 5,000만 톤 △ 석탄 1.5억 톤 △ 화력발전 5,000만 킬로와트 등 생산설비 감축 프로그램을 추진
- [부동산 재고 해소] 도시 특성에 따라 ‘투기가 아닌 주거’를 위한 부동산 정책 시행하여, 대도시는 부동산 억제책을, 중소도시는 부동산 재고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실시
- [기업부채 축소] 국유기업 재무 레버리지 감소를 통한 부채 리스크 축소를 추진하고, △ 인수합병 △ 구조조정 △ 파산 등을 통해 좀비 기업 청산할 계획
- [기업 원가 절감] 감세정책 및 수수료 인하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비용 감소할 계획
- [취약부문 지원]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빈곤퇴치, 농업, 재해지역 복구 등 취약부문에 투자하여 경제구조를 개선

■ [② 농업 공급 측 개혁] 특정 작물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재고증가 및 가격경쟁력 약화를 토지 개혁, 농촌 현대화 등의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 2015년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 농업 공급 측 개혁이 처음 논의되면서 중요 문제로 부각됨.
- 농업부문 공급 측의 과잉생산 및 재고 관리 문제를 효율적인 생산관리 시스템 도입, 토지 제도 개혁, 농업 신기술 개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개선할 계획

■ [③ 내수 진작] 소비 확대 및 업그레이드 방침을 마련하여 내수 소비를 증대하는 한편, 국유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

- 2016년 4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소비 주도의 사회경제 업그레이드 행동방안’¹¹⁾을 통해 10대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번 양회에서는 ‘10대 소비확대 액션플랜’을 발표하여 지속적인 내수 소비 확대를 추진
- 중국정부는 국유 독점 산업인 전신, 석유 및 가스탐사, 국방과학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PPP(민자유치)의 제도화를 추진하여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계획

9) 공급 측 구조개혁은 중국정부가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 총수요 관리를 통한 경제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구조 고도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총공급을 관리하고 토지,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해결하여 유효 공급을 창출하려는 것임.

10) 2015년 12월 중앙공작회의에서 공급 측 개혁을 강조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 과잉 생산설비 해소(去产能) △ 부동산 재고 해소(去库存) △ 부채 레버리지 축소(去杠杆) △ 기업원가 절감(降成本) △ 취약부문 지원(补短板)을 뜻함.

11) 「关于促进消费带动转型升级的行动方案」.

- 내수 진작 정책을 통해 2017년 사회소비품판매총액 증가율은 10% 내외, 2017년 사회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9.0% 내외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

■ [④ 제도 개혁 심화] 이미 도입한 개혁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세부 개혁 지침을 시행할 계획

- 행정 간소화 및 주요 국유 독점 부문의 혼합소유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며 투자 개혁과 가격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 법에 의거한 재산권 보호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공평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법률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재산권 보호사례를 전파하며 모범이 되는 기업을 표창하는 등 시장의 질적인 개선도 적극 추진

■ [⑤ 실물경제 발전] 혁신주도 발전을 지속하고 품질과 핵심경쟁력 향상을 우선으로 하며, 산업 업그레이드에 있어 브랜드 개발을 중시

- 경제발전의 신(新)동력을 육성하고, 공유경제 발전 및 인터넷 시장 진입을 위한 정책을 마련
 - o 정보 산업, 민간 우주 산업, 과학기술 인프라에 대한 건설 투입 확대, 전국 일원화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
 - o ‘과학기술혁신 2030 프로젝트’를 개시
 - o 창업·혁신 시범기지 등 혁신 및 창업 공간 마련 및 창업투자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
-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과 국가 전략산업 발전기금을 조성
 - o 신소재, 인공지능, 집적회로, 바이오제약, 5G 모바일 통신 등 첨단 전략업종에서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고, 시장화 방식에 따른 시스템 공정을 실시
 - o ‘인터넷 플러스’ 전략 및 빅데이터 분야의 중대 프로젝트를 추진
 - * 광역망 속도 향상 및 인터넷 서비스 요금 절감을 통해 혁신 및 기업창업 비용을 줄이고 산업 업그레이드 지원
- “중국제조 2025”의 실시 심화 및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
 - o 장비제조업 품질 제고 및 브랜드 구축, 소비품 공업 “삼품(三品)” 프로젝트, 서비스형 제조업 프로젝트 및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 발전 프로젝트 등을 실시
 - o 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 제조 확대, 최첨단 장비 발전 등 10대 프로젝트 중점 지원을 통해 전통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지속 추진
- 서비스경제의 혁신 발전을 추진
 - o 품질개선, 표준화 제고, 지적재산권 서비스 강화 등에 중점을 둔 서비스업 취약점을 보완하고 첨단 서비스 분야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

■ [⑥ 지역 협동 발전] 각 지역의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축과 성장벨트를 육성

- △ 일대일로 전략 △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 창장(长江)경제벨트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3대 전략의 효과적 추진

- [일대일로] 중점 지역, 중점 국가, 중점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실질적 협력을 추진
- [징진지] 베이징시는 서비스업 개혁·개방 시범지로 지정하여 현대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기반을 재편하고, 저발달지역인 허베이(河北)성에 베이징시의 비(非)수도기능¹²⁾을 이전하고 베이징 외곽지역에 행정 부도심을 설립할 계획이며, 교통, 생태보전, 산업 등 세 개 중점분야에서의 돌파구 모색 및 혁신, 개혁, 시범 프로젝트 등 세 개 중심축을 강화할 계획
- [장강경제벨트] 수로 원활화, 교통허브 연결, 강과 바다의 상호 연결,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추진/양쯔 황금수로의 중대 프로젝트 추진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수립
 - △ 서부대개발 △ 동북진흥 △ 중부굴기 △ 동부선도(率先) 등 지역발전 구도의 최적화
 - 호적제도 개혁, 국가 중점도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신농촌 건설 등 신형도시화를 추진

■ [⑦ 대외개방 심화] 쌍방향의 대외개방을 심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우위를 모색

- △ 6대 경제화랑 건설 △ 중요 항구·철도 등 인프라 구축 △ 국제 생산능력 협력 강화 △ 해외 경제·무역·산업단지 건설 등을 통한 일대일로 건설을 효과적으로 추진
- △ 가공무역 업그레이드 △ 수출신용보험의 기능 강화 △ 무역원활화 △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 무역마찰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을 통한 대외무역을 안정적으로 회복
- △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적극 추진 및 △ 외상투자기업 관리 제도 완비 등을 통한 외자(外資) 경영환경을 개선
 - 외자 개방 확대 및 적극 이용에 관한 약간의 조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판,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 목록'을 제시함으로써 개방분야 확대 및 관리절차 간소화를 추진
- 대외투자 활동 심사 강화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한 기업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해외진출을 유도

■ [⑧ 녹색발전] 환경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

- △ 생태문명 체제 개혁 심화 △ 주체기능구(主体功能区) 제도 개선 △ 자원 이용의 효율 제고 △ 환경관리 및 생태보호 강화 △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한 조치들을 제시

■ [⑨ 민생개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민생 보장 및 개선

- 빈곤층의 금융서비스, 보건, 교육, 교통, 전자상거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 관광 산업을 육성하며, 인터넷 기반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성(省)급 차원에서 실시
- 귀농 인력 또는 과잉생산 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창업 및 취업 지원을 지속하고, 지방 산업클러스터 조성, 농촌 전자상거래 장려, 과잉생산 축소로 인한 실업자들의 생활안정 프로그램 등을 추진
- 기본양로보험제도 개혁, 도농 주민 의료보험제도 통합, 장기요양보험 시범 실시 및 출산보험과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의 통합을 추진
- 교육, 의료, 사회보험, 인구정책, 문화 등 기초 공공서비스의 체계를 완비

12) 수도(首都)로서의 역할에 필수적이지 않은 기능을 의미함.

표 4. 2017년 경제운영 9대 중점업무

중점업무		주요 내용	
1	공급 측 구조 개혁	과잉생산 설비 해소	- △ 철강 5,000만 톤 △ 석탄 1.5억 톤 △ 화력발전 5,000만 킬로와트 등 과잉생산 산업에서 생산설비 감축 프로그램을 추진
		부동산 재고 해소	- 도시 특성에 따라 '투기가 아닌 주거'를 위한 부동산 정책 시행 - 대도시는 부동산 억제책을, 중소도시는 부동산 재고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실시 - 판자촌 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600만 호 공급
		기업부채 축소	- 기업 부채 레버리지 축소 - △ 인수·합병 △ 구조조정 △ 파산 등을 통해 좀비 기업 청산
		기업원가 절감	- 감세정책 및 수수료 인하를 통해 기업부담 경감 -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비용 감소
		취약부문 지원	-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빈곤퇴치, 농업, 재해지역 복구 등 취약부문에 투자
2	농업 공급 측 개혁	농업 구조 개선	- 중요 농산물 생산 기지 건설 - 농업, 축산업, 수산업 표준화 생산 및 품질 안전 보장 실시 - 농업순환경제 및 공농융합순환경제 시범구 건설
		농촌 인프라 건설	- 농업용수 공급 시설 172개 건설 가속화 및 15개 신규 공급시설 건설 착공 추진 - 농업 및 임업 분야의 PPP 시범구 시험 가동 - 서부지역 등 농업 낙후지역에 정보통신망 개통 및 관개시설 건설
		농기술 개발	- 전문 농업기술연구소 및 국가 농업과학 실험 플랫폼 건설 - 사물인터넷 시범 범위를 농업분야까지 확대할 예정
		농촌 신사업 개발	- '생산+가공+과학기술'이 융합된 농촌 현대화 - 향후 3년간 '인터넷플러스'를 활용한 농촌 현대화 방안 구체화
		개혁 가속화	- 중요 농산물 가격 형성 메커니즘 및 저장 제도 개혁 - 효과적인 토지 관리 방법 추진
3	내수 진작	소비 촉진	- '10대 소비확대 액션플랜' 추진 가속화 - 2017년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 10% 내외 증가를 목표로 함.
		투자 확대	- 민간자본 투자 독려를 위해 전신, 석유 및 가스 탐사, 국방 과학 분야 개방 - 2017년 사회고정자산투자 9% 내외 증가를 목표로 함.
4	제도 개혁 심화	개혁 심화	- 행정 간소화 및 공상 등기 기준 제정 - 원스탑 부동산등기정보제공 서비스 추진
		국유체제 개혁	- 기본적인 회사제도 개혁 달성, 회사법인 구조 및 시장경영 메커니즘 구축 -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군사 등 분야 혼합소유제 개혁 시범 시행
		투자개혁	- 정부 투자 조례 및 기업투자 항목 심사 및 비준 관리 방법 정식 시행 - 금융기관의 기업주식 투자 시범 시행 및 보험기금 등의 투자 메커니즘 개선
		가격개혁	- 전기 가격 개혁; 동북, 서북 지방 전기 가격개혁 시범구 지정 - 신재생에너지 가격 형성 메커니즘 구축 및 지원 방법 마련 - 의료서비스 가격개혁 추진
		공평한 시장 경쟁 환경	- 법에 의거한 재산권 보호 관련 정책 시행 및 재산권 보호제도 강화 - 공평한 경쟁을 위한 심사제도 전면 시행 - 기업가 정신 관련 정부 의견 정식 시행
		세수 및 금융 개혁	- 중앙과 지방정부 지출, 수입 의무를 분배하는 방안 마련 - 증권법 수정으로 증권 발행제도 개혁

표 4. 계속

중점업무		주요 내용	
5	실물 경제 발전	경제발전의 新동력 육성	- 공유경제 발전, 인터넷시장 진입을 위한 정책 도입 - 정보, 민간 우주, 과학기술 인프라건설 투입 확대 - '과학기술 혁신 2030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 개시 - 창업 혁신 시범기지 건설, 혁신·창업 플랫폼의 시장화 운영 및 창업 인재 양성 지원 - 창업투자의 지속적 발전 촉진
		신흥산업의 지속적 발전	- 신소재, 인공지능, 집적회로, 바이오제약, 5G모바일 통신 등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 인터넷+ 및 빅데이터 분야의 중대 프로젝트 추진 - 광역망 속도 향상 및 인터넷 서비스 요금 절감을 통해 혁신·창업 비용 절감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 '중국제조 2025'의 실시 심화 - 장비제조업 품질 제고 및 브랜드 구축 - 서비스형 제조업 프로젝트 및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 발전 프로젝트 등의 실시 - 기업 스마트화, 인프라 능력 제고, 녹색제조 확대, 최첨단장비 발전 등 10대 공정 중점 지원을 통해 제조업 업그레이드의 지속적 추진
		서비스 경제의 혁신 발전	- 품질개선, 표준화 제고, 지적재산권 서비스 강화 등에 중점을 둔 서비스업 취약점 보완 - 첨단 서비스 분야 혁신 프로젝트 추진
6	지역 협동 발전	3대 전략의 효과적 추진	- [일대일로] 중점 지역, 중점 국가, 중점 프로젝트 선별하여 실질적 협력 추진 - [징진지] 교통, 생태보전, 산업 등 세 개 중점 분야에서의 돌파구 모색 및 혁신, 개혁, 시범 프로젝트 등 세 개 중심축의 강화 - [창장경제벨트] 수로 원활화, 교통허브 연결, 강과 바다의 상호 연결,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추진/양쯔 황금수로의 중대 프로젝트 추진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수립
		지역발전 구도 최적화	- [서부대개발] 인프라의 취약부분 보완 및 생태환경 보호, 특색 우위산업의 업그레이드 발전 가속화 - [동북진흥]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 정책 및 임무 전면적 실시 - [중부굴기] 한강과 화이하 생태경제벨트의 발전 가속화 지지 및 산시(山西) 개혁시험구의 운영 원활화 - [동부선도] 경제구조 전환 및 발전을 가속화하고 개혁혁신의 선도효과 발휘
		신형도시화 추진	- 호적제도 개혁, 거주증 제도의 전면적 적용, 농촌 호적의 도시 주민을 주택적립금 적용 범위에 순차적으로 편입 - 국가 중점도시 개발 계획 개시 및 일정 자격을 갖춘 현(縣) 및 규모가 큰 진(鎮)의 시(市) 승급 추진 - 신형도시화를 통해 신농촌 건설, 농촌의 1, 2, 3차 산업 융합발전 촉진
7	개방 수준 제고	일대일로 효과적 추진	- 6대 경제회랑 건설 촉진 - 중요 항구 및 고속철도 건설 추진 - 국제 생산능력 협력의 실질적 추진 및 중국 장비, 기술, 표준 및 서비스의 해외 진출 - 해외 경제·무역구 및 산업단지 개발에 박차 - 온라인 실크로드 개발 협력 촉진
		대외무역의 안정적 회복	- 수출신용보험의 기능 강화 - 가공무역 업그레이드 및 중서부 지역으로의 점진적 이전 추진 - 무역원활화 촉진: 국제무역에 대한 단일창구 시스템의 전국적 시행 - 첨단기술 및 장비, 핵심 부품의 수입 증대 - RCEP 협상의 진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유무역협정 체결
		외자 경영환경 개선	- '외자 개방 확대 및 적극 이용에 관한 약간의 조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판,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 목록' 제시: 개방분야 확대 및 관리절차 간소화 추진 -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적극 추진 - 외상투자기업 외채 관리제도 완비
		대외투자의 건전한 발전	- 대외투자 활동의 진위심사를 엄격하게 실시 및 대외투자의 리스크 관리 - 기업의 합리적·합법적 저우추치(走出去) 유도

표 4. 계속

중점업무		주요 내용	
8	녹색 발전 가속화	생태문명 체제개혁 심화	- 생태보전 목표 달성 성과 평가 및 2016년 성(省)별 녹색성장지수 평가 -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 개혁 추진 - 녹색금융 체제 건전화 및 녹색채권 발행 확대
		주체기능구 제도 개선	- 전국 및 각 성(구, 시)의 주체기능구 계획 수정 작업 개시 - 성급 공간계획 시범적 추진 및 시·현 공간계획 지도의견 제정
		자원 이용 효율 제고	- 에너지, 물, 토양 보호를 위한 여러 프로젝트 시행 - '인터넷플러스' 자원순환 행동방안 제정 - 자원 순환 산업 시범기지 및 폐기물 종합 기지 건설
		환경관리와 생태보호 강화	- 대기, 물, 토양 오염 관리에 관한 '3대 행동계획'의 실시 - 중점 도시에서 생활쓰레기 분리 제도 추진 및 오염물 배출 허가제 실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파리협약 후속협상에 적극 참여 및 주도적 역할 수행 - 국제 대화 및 실무협력의 지속적 추진 및 기후변화 남남(南南)협력 강화
9	민생 개선	빈곤퇴치 적극 추진	- 관광 등 지방산업 발전 지원, 구직활동 지원 등 빈곤완화 조치 실시 - 인프라 및 기초 공공서비스 부족 지역에 대한 개발 지원
		취업우선 전략의 전면적 실시	- 귀향 농민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방 산업클러스터 조성, 농촌 전자상거래 장려, 과잉생산 축소, 대안산업 발전 - 석탄, 철강 과잉생산 축소로 인해 해고된 인력 재고용·재정착 서비스 제공
		사회보험 제도 개혁 심화	- 기본양로보험제도 개혁 및 도농 주민 의료보험제도 통합 가속화 - 장기요양보험의 시범 실시 - 출산보험과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 통합 시범 실시
		기초 공공서비스 체계 완비	- 고등교육 입학제도 개혁, 전국 공공병원 종합개혁 추진(의료 컨소시엄 형성을 통한 의료자원 공유로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 - 정부의 두 자녀 허용 정책에 따른 출산 보전 서비스 수준 제고

자료: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 재정리.

4. 평가 및 전망

■ [정부 업무보고] 2017년 중국정부는 2016년에 이어 '안정 속의 개혁 추진'(稳中求进)을 국가 운영의 총 기조로 정하고, 성장, 개혁, 구조조정, 민생, 개방, 혁신 등의 국가운영 목표를 강조하였으나, 대내외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경제운용 내용에 있어 변화를 보임.

-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발전'이라는 단어가 122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개혁'(74회), '경제'(69회), '혁신'(40회), '성장'(28회), '안정'(19회), '민생'(18회), '개방'(15회), '핵심'(11회), '구조개혁'(10회) 등을 강조
- 2016년과 비교하여 사용이 늘어난 단어는 '안정'과 '핵심'인데, '안정'은 2017년 중국경제가 성장보다는 안정을 목표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핵심'은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확고해졌음을¹³⁾ 알 수 있는 대목임.

13)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발표한 「20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라는 구절을 6차례나

- 이번 「정부 업무보고」에는 △ 파란하늘 지키기 전쟁(蓝天保卫战) △ 하천 관리 책임제(河长制) △ 디지털 경제(数字经济) △ 디지털 가정(数字家庭) △ 인공지능(人工智能) △ 5G모바일 통신(第五代移动通信) 등 12개의 새로운 단어가 제시되어, 중국정부의 환경보호, 4차 산업혁명, 차세대 기술에 대한 관심을 반영

표 5. 2016년과 2017년 「정부 업무보고」 주요 키워드

연도	발전	경제	개혁	구조개혁	성장	혁신	안정	개방	민생	소강사회	빈곤탈퇴	핵심
2017	122	69	74	10(6)	28	40	19	15	18	4	7	11
2016	152	90	76	10(5)	42	61	14	19	18	9	8	5

주: () 안은 '공급 측 구조개혁'의 언급 횟수임.

자료: 「2016년 정부업무보고」, 「2017년 정부업무보고」, 임호열 외(2016), 「중국의 2016년 경제운용 방향 평가와 한국의 대응」, 오늘의 세계경제, 16-10, p. 10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안정’ 위주의 경제운용]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로 본 2017년도 중국경제 운용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시대적 배경하에서¹⁴⁾ ‘성장’보다는 ‘안정’(稳)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한바, 대내적인 개혁 과제 수행 및 리스크 억제를 위한 ‘안정’ 위주의 경제운용이 전망됨.

- 2017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 경제성장률 목표치의 하한선인 6.5% 내외로 제시한 것은 중국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중국경제 개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기업부채 레버리지 증가, 부동산 거품 야기 등)을 최소화하고, 이와 동시에 공급 측 구조개혁 추진을 통한 체질 개선과 금융 리스크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
- 2017년 하반기에는 향후 5년(2018~22)간 중국을 통치할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제19차 당대회가 개최될 예정인바, 중국정부는 순조로운 시진핑 1인 집권체제 구축을 위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3월 14일에 발표한 2017년 1~2월 통계에¹⁵⁾ 의하면 투자, 소비, 수출, 공업, 서비스업 등 주요경제지표가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여, 2016년 하반기 이래 안정적인 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거시경제정책 기조 변화] 2017년 거시경제 정책 기조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난 몇 년간 시행해오던 ‘확장적 재정정책+안정(稳健)적(사실상 확장적으로 운용) 통화정책’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중립적 통화정책’의 정책 조합으로 전환되어, 중국경제의 연착륙에 있어 재정정책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

-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기존의 ‘안정(稳健)’에서 ‘안정·중립’으로 전환하고, 부채 레버리

언급한 점은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1인 지배체제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금년 하반기 개최예정인 19차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 구성을 통해 시진핑 1인 지배체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

14) 2017년 중국 양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유럽국가들의 유로존 탈퇴 논의 등 글로벌 신보호주의와 신고립주의가 확산되고 북한의 핵도발로 인한 동북아 정세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개최됨.

15) 国家统计局, 1-2月份国民经济运行稳中向好, http://www.stats.gov.cn/tjsj/zxfb/201703/t20170314_1472316.html (검색일: 2017. 3. 15).

지 축소 등 금융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였으며, M2 및 사회용자총액 증가율 목표를 2016년보다 1%p 낮은 12%로 설정한 점을 감안하면 2016년과 비교하여 다소 긴축적인 운영이 예상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의 확장적 통화정책 실시로 풀린 자금이 실물경제의 건전한 발전보다는 부동산 자산버블 및 비효율적인 국유부문 확대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바, 공급 측 개혁을 뒷받침하고 실물부문의 취약한 영역(중소기업, 농촌, 저개발지역, 저소득층)에서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통화정책의 전달기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2016년 10월부터 시행한 대도시 위주의 부동산 억제 정책 실시 등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 실시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하방 요인을 상쇄할 것으로 보이는데, 6.5% 수준의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국가전략 추진 심화] 2017년은 제13차 5개년 계획 시행 2년차가 되는 해이자 새로운 당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전략이나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2016년 13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 공급 측 구조 개혁 △ 중국제조 2025 △ 인터넷 플러스 △ 대중창업·만중창신 △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 일대일로 등 국가전략을 심화하거나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

- 중국정부는 2017년을 ‘공급 측 구조개혁 심화의 해’로 규정하고, 5대 중점 업무(3去1降1补)로 적극 추진하고, 총수요 조절 정책인 재정 및 통화정책이 총공급에 있어 유효공급을 창출하고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계획
- 창업 정책(대중창업·만중창신)은 △ 혁신·창업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방안 △ 혁신 인재 육성방안 △ 정부기업의 벤처기업 지원방안 △ 창업 분위기 조성 △ 혁신에 유리한 광역망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하여 2016년에 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 더욱 구체화되고 진전을 보임.
- 국가 신흥전략산업 관련 △ 신소재 △ 인공지능 △ 집적회로 △ 바이오제약 △ 5G모바일 통신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인터넷 플러스 전략도 기존의 제조업과의 융합에서 벗어나 친환경 산업 또는 빈곤퇴치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등 그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징진지 통합발전 전략의 경우, 2016년에 비해 베이징시의 비(非)수도기능 이전 및 행정 부도심 건설에 대한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베이징시의 서비스업 발전 현황 및 징진지 교통·환경·산업 지역협력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
- 일대일로 전략은 △ 과다르 등 거점 항구 건설 △ 연선국과 고속철도 연계 △ 중국-유럽 화물철도 △ 글로벌 생산과잉 해소 협력 △ 해외(境外)산업단지 및 초국경(跨境)경제협력구 건설 등 2016년에 비해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제시

■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 2017년 중국은 과거 정부 업무보고와 달리 금융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조하였고, 이 중 기업부채 및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물경제 및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 [기업부채 리스크] BIS 통계에 의하면 2016년 9월 기준 중국의 국가총부채¹⁶⁾는 GDP 대비 255.6%이고, 이 중 기업부채는 GDP 대비 166.2%를 차지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율도 높게 나타나 부채 리스크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¹⁷⁾
- 기업부채의 급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가 시행한 대규모 경기부양 자금이 비효율적인 국유부문으로 집중되었고,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해 구조조정기를 거쳐야 했던 중국기업들이 정부의 지원하에 한계기업 퇴출이 지연되고 생산과잉 문제가 축적된데 기인
 - 또한 중국 자금조달 구조는 △ 높은 저축률 △ 주식·채권 등 직접금융시장 미발달 등으로 인하여 국유 상업은행 대출 중심의 간접금융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은행 대출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중국 국유기업에 집중되어 과잉생산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이 상황이 지속되면 ‘국유기업 설비가동률 하락 → 영업이익 감소 → 채무 상환능력 축소 → 한계기업 증가 및 기업도산 확대 → 상업은행 부실채권(NPL) 증가 → 금융 시스템 위기 발생’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으나, 2016년 12월말 기준 중국 상업은행의 NPL 비율(1.74%), 자기자본비율(13.28%), 대손충당금 적립비율(177%)¹⁸⁾ 수준을 감안하면 은행 건전성이 양호하고 중국정부 대응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임.
- 중국정부는 기업부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 철강·석탄 등 과잉생산 국유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 감세정책 및 수수료 인하 조치를 시행하여 기업 세금·경비 부담을 경감하며 △ 기업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
-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표적인 그림자 금융으로 지적되었으나, 중국정부는 지방채 발행 허용 및 채무교환 프로그램 실시 등으로 대응하고 있어 관리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샤오제 재정부장은 3월 7일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중국 2016년 말 기준 정부부채 잔액은 27조 3,300억 위안으로 GDP 대비 부채율은 36.7%로 다른 국가와 비교 시 높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했고, 이 중 지방정부 부채 잔액은 2016년 말 기준 15조 3,200억 위안으로 일부 지역에서 상환 능력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지방정부 채무 관리·감독 강화 의지를 밝힘.
-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 억제 및 안정적인 자금조달 보장을 위해 중국정부는 △ 지방정부 채권(일반채권과 특별채권) 발행액 상한선을 설정·관리하고 △ 기존의 만기도래·고금리 채무를 장기·저금리 지방채권으로 전환하는 채무교환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 공공사업 민자유치(PPP: Public-Private Partnership)를 적극 활용할 계획 **KIEP**

16) 경제주체별 부채 비중은 기업부채가 166.2%, 정부부채가 46.1%, 가계부채가 43.2%를 차지(2016년 9월 기준).

17) BIS, “Data: Total credit to the non-financial sector”(last updated 6 March 2017), <http://www.bis.org/statistics/totcredit.htm> (검색일: 2017. 3. 15).

18) CEIC (검색일: 2017. 3. 15).

부표 1. 중국 경제지표의 2016년 실적과 2017년 목표

구분	지표	2016년		2017년 목표
		목표	실적	
성장	경제성장률(%)	6.5~7.0	6.7	6.5 내외
생산	식량생산(억 톤)	5.5 이상	6.2	5.5 이상
국내 수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10.5	7.9(실질 8.6)	약 9.0
	소비재 소매판매 증가율(%)	11.0	10.4(실질 9.6)	약 10.0
취업	도시 신규 취업자 수(만 명)	1,000 이상	1,314	1,100 이상
	도시지역 등록실업률(%)	4.5 이내	4.02	4.5 이내
대외 경제	무역증가율(%)	세계시장 점유율 유지	-0.9	상품무역 안정적 수준 회복 서비스 무역 성장 외자유입 규모 유지 해외투자 안정 발전
	비금융기구 해외투자액(억 달러)	1,298(+10% 내외)	1,701	1,700
	비금융기구 외국인투자액(억 달러)	1,276	1,260	1,260
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	3.0 내외	2.0	약 3.0
재정 금융	총통화(M2) 증가율(%)	약 13.0	11.3	약 12.0
	사회용자총액(잔량) 증가율(%)	13 내외	12.8	약 12.0
	재정적자(조 위안)	2.18 (중앙 1.4, 지방 0.78)	2.18 (중앙 1.40, 지방 0.78)	2.38 (중앙 1.55, 지방 0.83)
	재정적자/GDP(%)	3.0	2.9	3.0
자원 환경	GDP당 에너지 소모량 감축률(%)	3.4 이상	5.0	3.4 이상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률(%)	3.9 이상	6.6	4.0
	GDP당 용수량 감축률(%)	5.1	5.6	-
	COD 배출량 감축률(%)	2.0	2.6	4.0
	이산화황 배출량 감축률(%)	3.0	5.6	3.0
	암모니아 배출량 감축률(%)	2.0	2.9	-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률(%)	3.0	4.0	3.0
	PM2.5 표준 미달 도시의 농도(%)	3 미만	8.8	-
	지급 이상도시 대기질 우량일수 비율(%)	77.0	78.8	-
	Ⅲ급수 이상 비율(%)	66.5	67.8	-
	V급 미달 수질 통제비율(%)	9.2 이내	8.6	-
도시 화	호적인구 도시화율(%)	41.2 이상	41.2	+1.0%p 이상
	상주인구 도시화율(%)	57.10	57.35	58.25
	도시 지하철합관 건설(km)	2,000	-	-
민생	농촌 절대빈곤인구 감축(만 명)	1,000 이상	1,240	1,000 이상
	도시 보장성주택 건설(만 채)	-	-	-
	판자촌 개조(만 채)	600	606	600
	농촌 위험주택 개조(만 호)	314	약 380	-

주: 도시 호적 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도시 호구(户口)를 취득한 인구를 뜻함.

자료: 「정부업무보고」; 「2016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